

서울시-美 마이애미시 우호협력도시 MOU 체결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 협약

도시교통·스마트시티 기술혁신·도시계획·관광 다각적 협력 통해 UAM 미래교통 도입 기대

양보현 기자 report0330@dtoday.co.kr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프란시스 수아레즈(Francis Suarez) 마이애미 시장이 서울을 방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양 도시는 도시교통, 스마트시티, 기술혁신, 도시계획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MOU) 체결은 우호도시협정 체결을 위해 프란

시스 수아레즈(Francis Suarez) 마이애미 시장이 서울을 방문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마이애미시는 '남부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미국 남부의 금융, 첨단사업, 관광 중심지이며, 총 인구의 70%가 히스패닉계로 미국과 중남미를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남미 69개의 도시로 직항이 연결되어 미국과 중남미 간의 물류인적 교

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중남미 시장 진출

본부로 적극 활용 중이다. 마이애미는 중남미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중남미로 가는 미국 화물의 80% 이상이 마이애미를 통과한다.

특히, 마이애미시는 미국 도시로는 최초로 도시-민간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마이애미시는 현대자동차에서 미

국에 설립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인 UAM(Urban Air Mobility)의 기체 개발 제조 기업인 슈퍼닐(대표이사 신재원)과 UAM 분야 공동정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서울시 또한 현대자동차와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우호협력이 두 도시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함께 다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래교통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를 뜻한다.

메가시티로 대변되는 미래 대도시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떠오른 미래 모빌리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마이애미시가 우호협력도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이애미시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양도시 간 경제 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 1곳 문 닫아

가정어린이집 35% 없어져
재원아동수는 32만명 감소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세 영아 돌봄 수요를 주로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 말의 3만9천171개에서 8천248개(21.1%)가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기간 1만8천651개에서 1만2천109개로 3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는 작지만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수요가 높았다.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01세를 포함한 어린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타격은 전체 어린이집으로 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어린이집은 1만3천518개에서 9천726개로 28.1% 줄었고 협동어린이

집 수는 19.5%, 법인·단체 운영 어린이집 수는 18.4%,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수는 8.9% 줄었다.

반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은 6천90개에서 8천346개로 37.0% 증가했다.

공공어린이집의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상당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을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7천77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562명까지 줄었다.

2022년은 111월까지 23만1천862명이 태어났다.

실제로 전국 어린이집의 총 재원아동 수도 2018년 141만5천742명에서 109만5천450명으로 22.6% 줄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어린이집 폐원 통보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2년 가까이 만족하고 보낸 가정어린이집이 원아 모집 미달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폐원을 막고 싶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속상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다니던 어린이집마다 폐원해 전원하는 바람에 어린이집 가방만 3개"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올해부터 01세에 도입된 부모급여로 인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비율이 5% 이하인 데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만큼 부모급여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령별 발달 격차가 큰 05세가 통합기관을 다니게 될 경우 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거나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위례 아이숲 어린이집에 등원한 어린이가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주·맥주 가격... 올해 또 오른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

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제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회사 중 진보발효와 MH 에탄올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

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이런 점을 고려했던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에서 '소주 1병 6천원' 가격표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다만 하이트빈이, 오비맥주 등 주류업체들이 아직은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기고

'홍어선거' 등 돈선거 구태 이제는 끊어야



양재술 강동구선거위원회 선거1계장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산림조합 및 농·수협 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제2회에 이어 올해 3회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대상조합은 전국 총 1353개, 조합별로는 농협 1,119개, 수협 92개, 산림조합 142개로 선출규모 면에서 지방선거의 3분의 1에 달하고, 선거인수는 264만여명에 달한다.

선관위가 201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한 이유가 '돈선거 근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 제공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정 양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홍어 받았으면 자수 하세요"라고 선관위가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보도됐다.

어느 지방의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설 명절 전후로 조합원들

에게 선물로 홍어를 들였고, 이런 사실은 홍어를 받은 한 조합원이 지역선관위에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조합장선거가 매년 금품 수수, 음식물 제공 등의 잡음으로 얼룩지는 것은 조합장이 갖는 권한과 이점 때문이다.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못지않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지역 사회의 풀뿌리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조합장선거는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인 조합원의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고, 후보자와의 지연·할연·학연 등 친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선거 근절이 쉽지 않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포상금(최대 3억원)과 과태료(최고 3000만원)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깨끗한 선거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인인 조합원 스스로 돈선거를 근절하겠다는 투철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깨끗한 조합장선거는 매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부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현명한 유권자인 조합원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지역과 조합을 발전시킬 정책약약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능력있고 훌륭한 조합장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사학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조경태 의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발의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고 있어 사학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학연금공단 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폐교에 따

른 연금 지급자 수는 2017년 46명에서 2021년 336명으로 7배 이상 늘어났고,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는 11억 5173만 원에서 68억 2284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할 때부터 5년 이 경과한 때)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고민정 의원,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결의안 발의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관례를 모색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굴욕외교'로 비판을 사

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뒤,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안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취지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행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계승시 수 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